

종 합 토 론

● 한진수(사회자, 동국대 교수)

3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정된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하지만 끝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맞춰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학회 끝나면 곧 만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5~60명을 준비했는데 매번 2~30명밖에 안 남으셔서 2인분, 3인분씩 먹고도 남아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지방에서 멀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식사를 못하고 가시는 공무원들 많으신데, 조금 늦게 들어가시더라도 오늘 맛있는 걸 해 놨다니까 만찬에 참석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분과 발표자와 토론자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 주실 분은 행정자치부 정운한 사무관님이십니다.

그 다음 오른쪽부터 가톨릭대학의 조현연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김경호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이 효 박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까 2시부터 열심히 토론, 플로어에서 질문에 많이 참여하셨는데 그때 답변에 중심에서 있어야 할 행정자치부 당국자 정운한 사무관님이 제1분과에 참여를 못해서 그 질문을 저희들 분과 토론 끝나고 받는 형식으로 취하겠습니다. 제목이 “지방정부회계제도 도입의 성과와 과제”인데, 성과 얘기는 한 30초만하라고 그리고 과제를 한 30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또는 실무를 지휘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내지는 어려운 점 아까 얘기했던 기초재산실사라든지 기타 기초 재무제표를 만드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여기에서 정운한 사무관님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정사무관님께서 성과보다는 문제점 중심으로 발표를 15분 해 주시고 토론자는 3분 밖에 안 드리겠습니다. 3분만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 정운한(행정자치부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정운한 사무관입니다.

제가 복식부기 업무만 한 게, 원래 성격이 급하고 오래 있지를 못해서 1년 이상 해 본 보직이 별로 없는데 이거하다 보니까 벌써 3년 6개월동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학회에 초창기 구성돼서 발표할 때 굉장히 어렵고, 떨리고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은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학회가 활성화가 되고 의견이 다양해지니까 상당히 제가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도입 초창기에는 뭐하러 하느냐 이런 쪽의 논의만 하다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부터 들었는데, 교육도 구체적인 데이터가 등장하고 이러한 기초적인 활동을 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자. 옛날에는 백지에다 그림을 그렸던 것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주고 이것을 어떻게 바꿔 나가자는 대안 쪽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다가 또 한편으로 그림 실컷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확 종이 찢어서 다시 그리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현명하게 제도의 발전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 인프라 부분은 뭔가 눈에 보이는 아름답지 못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빌딩 지을 때 기초공사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기는 싫더라도 튼튼히 갖추어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제도의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복식부기는 혁명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일본의 학자가 있었는데, 교과서도 그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혁명사업 하는데 깃발 들고 나서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가운데 이렇게 가다보면 실무적으로 공무원의 열량의 한계도 있고 그런 것들은 학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탄력적으로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력의 한계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수준의 한계도 있고 해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힘을 빌어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46페이지를 보면 회계시스템의 개혁을 하는데, 현행제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현행제도와 조화를 이뤄가는 가운데 앞으로 복식부기 쪽이 점점 점점 강조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행자부 내규에서 극단적으로 제가 복식부기를 할 때 저를 불러다놓고 행자부 담당직원들은 다 복식부기를 동의를 해서 저를 불러서 이렇게 TF를 만들고

이런 줄 알았더니, 담당직원들간에도 전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 청와대 차원에서 “이것을 해라.” 이런 쪽으로 등장해서 그런지 저보고 하는 말이 “복식부기 되나 보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현행 세입 세출 결산하는 담당이, 그러던 담당이 오늘에 와서 국회에 같이 가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복식부기가 주가 되고, 세입 세출결산서는 부속명세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일하자.” 먼저 그런 제안을 받아서 행자부 내의 공무원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산제도가 일원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가고 아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회계시스템 42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 운영의 어떤 발전주의 복식부기의 공개와 투명성과 합리적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민을 삶을 향상하는 쪽에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시화된 결론이 아직 안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안타깝고 논의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43페이지에 보면 현행 예산제도에서 회계정보를 추출해 내고 또한 기존의 자산, 부채였던 과거로부터 있었던 것은 새롭게 복식부기 체제 내에서 실사를 해서 넣어서 복식부기 결산이 이루어지고, 세입 세출결산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래서 통합재정정보가 이루어지는데 나중에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재무보고서라는 것이 복식부기 보고서 따로 세입 세출결산서 따로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서 그게 완전히 일원화되는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는 국가재정법하고 국가회계법을 만들면 결산 쪽을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일원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누차 저희들이 공개가 되어 있고, 학회에서 지난해에 발표를 한 부분은 쉽게 넘어가고요. 주요 포커스에 맞췄던 것이 46페이지 법령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가장 최초로 근거법은 2004년 1월에 공표된 지방분권특별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강인재 교수님께서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이 조문을 넣어서 상당히 우리가 추진하는데 공식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희 행자부 복식부기팀이 공식적으로 구성되는데 일조를 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들이 일할 때 동기부여를 크게 받았던 규정 11조 5항이 하나가 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우리의 복식부기제도 도입의 법제사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요구 규정인데,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복식부기 제도의 근간

으로 삼으라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작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작업을 할 때 지방재정법 53조를 규정해 놓고, 거기 시행령에 보면 회계기준에 규칙적으로 담아야 할 사항과 공인회계사 검토의견까지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령에서는 이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국가회계기준과의 연계를 갖기 위해서, 기획단에서 통일성을 갖는 규정들은 통일을 하자는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통일과 연계성을 갖는 규정을 마련하자는 권유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와 재무결산에 관한 기준을 하는데 지방회계기준을 재정하는 것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자문이전까지는 용역업체와 회계제도개선협의회 다양한 분들,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는 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했다가 행정 현실을 반영하고 재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재정안을 가지고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운영보고서 이런 쪽에 주요쟁점이 몇 가지 정리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보면 전 섹션에서 출납폐쇄기관을 인정하는 문제가 그런 것들도 본인의 관점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은 여태까지 40년 동안 예산의 집행실적의 기록으로서의 회계의 마인드 갖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발생주의라고 해서 출납폐쇄기관 인정을 안 했을 때 겪는 혼란이 너무 컸기 때문에 향후 출납폐쇄기관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하되, 회계기준에서 없었을 때 너무 혼란이 컸다라는 실무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실무공무원들 입장,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또 실무공무원이 “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당연히 논의될 수 있는 타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해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경험이 쌓이고 연구가 되면서 프레스블하게 개선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회계기준 자체가 법률사항도 아니고, 우리 행자 부령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탄력적으로 개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방공무원 일관성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바뀌고 이런 것이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제도 도입 초창기의 겪는 혼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오히려 업무담당자는 이러한 변화 과정을 잘 인식하다 보면 우리의 업무 능력 자체가 상대적으로 공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계기준의 큰 골격과 아주 기본적인 대상은 마련되어 있고, 공세부업무 처리지침을 나름대로 공무원들과 회계사들 자문을 얻어서 마련해 놨는데, 그것 자체가 실제로 픽스

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모호합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규정,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자체가 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외국의 경우를 봐도 몇 년간의 임상실험을 거쳐서 된 건데, 우리는 그러한 완성되기 까지 쉽게 공유재산물품 현재 보고서 만든 거 지방자치단체 관리체제를 비판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현행법에 의해서 해왔었던 관행 자체를 바꿔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그 다음 실제로 가장 큰 어려움은 부처의 협조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는 당사자한테 공문을 요청했을 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행정에서는 그간 행태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자료 취득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식부기제도 자체가 엄청난 행태를 변화시키는 작업이다. 이런 차원에서 혁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고들이 변화돼서 51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회계기준을 정해서 지침을 해 보고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것과 그 다음에 세입세출결산서와의 관계 이런 것을 읽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원가, 관리회계적 차원에서는 원가제도까지도 우리가 세련되게 만들 단계가 되려면 향후 몇 년간 소요될 기한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책적인 사항으로 52페이지에 보면 회계정보시스템인데 ... DAIS로 변경돼서 이제는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까지의 변화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기술적인 사항도 자꾸 바뀌니까 혼란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으로는 옛날 거를 그대로 고집하는 자체가 또한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더 추가해서 발전하면 더 좋을텐데, BPRIST를 통하고 어떤 예산제도 자체가 근본이 바뀌어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새롭게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이 먼저 제도가 바뀌고 그 위에 부수적으로 회계가 어떤 타임시리즈상 그렇게 전개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정치적 과정이거거든요. 회계 쪽에 먼저 좀더 태클이 들어가서 변화고 나중에 우리가 복식부기 회계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개혁의 과정에서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이런 것을 만들면서, 사실 그것을 우리가 정부회계학회에서 사실 그런 것들을 강하게 어필한 다음에 예산제도가 사실 개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업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러고 나니까 “왜 복식부기 먼저 해 가지고 혼란을 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역사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회계 쪽에서 먼저 접근했다가 나중에 예산이 정말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자꾸 시그마를 줍니다.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산과 회계가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혼란이 큼니다. 동시에 예산 관계가 매끄럽게 되면 좋을 텐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도 그러한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2007년도까지는 품목별 예산제도화 시스템운영이 가능하니까 2007년도까지는 물론 미비점도 있고 아직 시스템에 예러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어거지지만 세입 세출결산서를 보고 극단적인 수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수정보나 맞추는 수준으로 가더라도 일단은 했다가 표준지방재정시스템 2008년도에서는 정말로 세련된 모습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시스템개발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과제를 보면 53페이지를 보면 가장 큰 것이 제도적 미비 사항이다. 물론 법령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지침입니다. 그것이 자산부채나 이런 것들이 이게 자산부채를 실제적으로 제가 요구사항에 보면 첫 번째가 이것을 자산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자산의 내역을 정확히 불가능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 방침은 자산에 대한 정확한 독립된 실체가 있고, 우리가 자산의 규정에 의한 나중에 계속적인 어떤 행정서비스의 창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자산에 정리 되어 있다면 그 정의에 맞는 것도 우리가 최대한 조사해서 기본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얼마나 내역자체를 쉽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평가문제인데, 지금 제가 하는 솔직한 얘기는 평가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내역이 정확히 보고되는 것이 1차적이고, 평가 자체는 우리가 최대한 2008년도에 여러분들이 재무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보고 하는 시점이전까지는 우리가 정해야 될 책임은 갖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들, 취득원가를 했으니 너무나 격차가, 취득원가주의의 극단적인 것이 뭐냐하면 그동안 자산관리 엉망으로 하고 있던 데가 취득원가로 안 하고 대체평가 하니까 엄청나게 고평가되고 옛날에 자산관리 정말 잘하던 부서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산을 엉망으로 관리한 동네가 잘 살고 돈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가 제도도입 초창기에는 형평성을 맞춰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심의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들을 하고, 소위 임목 같은 것들도 얘기 들어보면 관상수나 아니면 가로수나 옛날에 취득할 때는 이만했는데, 다른 데는 자라 가지고 이런데, 디테일한 사항 하나하나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점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가 일단 목록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관리해 나가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이 발전을 한다고 그러면 실현이고 하나의 재미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당장 디테일한 부분까지 문제점을 자꾸 드러내고 제도 자체의 어떤 기반을 다 흔들어 나가면 우리는 같은 동업자 같이 느껴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도 손해예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물론 여기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 것을 하면서 제도가 보완이 되도록 그런 핵심적인 작업이 아마 회계처리 매뉴얼을 통해서 할 건데, 그게 저희들의 어떤 로드맵상 10월은 되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얘기는 다 취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서 6월경에 되면 회계기준의 기본 골격이 나오면 몇 개월은 지침을 다루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운영 자체를 하는데 시험운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과정인데, 그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데이터 요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그냥할 거고 저번 세션에서도 얘기했지만 회계제도에 대한 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여기에서도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업무전담자에 대한 교육이 지방행정연구원과 자치경영평가원에 하나, 급하게 너무 교육수요가 폭등은 하는데 대책은 없어서 긴급하게 협의를 해서 실무담당자 실무교육 위주로써 2과정 프로그램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3~400명 되면 업무담당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올 상반기 중에는 교육이 다 이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는 구체적인 시험운영 결과도 나오고, 오전에 듣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심해서 그런지, 그런 것을 크게 못 느꼈는데 “자치단체장을 교육시켜야 된다.” 라는 것에 제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올 하반기에 정말 자치단체장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몇 시간이 됐든 일괄교육이 됐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 있는 심의위원들이 정부회계학회 교수님들이 정말 임팩트가 아주 강하게 느껴 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이 제도 자체가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교육프

로그래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론만 많이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인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까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의 세미나 했는데 오늘 세미나 자료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제도개선을 할 때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깊이 있게 참고해서 정리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한진수(사회자, 동국대 교수)

감사합니다.

정운한 사무관님은 한때는 팀장이었다가 요새는 팀원으로 강등이 됐는데, 행자부 조직구조가 바뀌는 바람에 당시 저희들이 복식부기팀장으로서 굉장히 정부회계학회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우리나라 복식부기 발생주의 도입을 위해서 서로 공생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계속 열성과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는 웬만한 회계학 교수보다 복식부기에 대해서도 더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각 지자체에서 일어나서 많은 애로사항 내지는 개선요망사항이 충분히 소화가 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조금 뒤로 넘기고, 우선 오늘 나와 주신 토론자 분들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오른쪽 조현연 교수님부터 토론 부탁드립니다.

● 조현연(가톨릭대 교수)

지금 정 사무관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에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제가 크게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복식부기가 하나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잘 되면 진짜 혁신이 추구가 돼서 여러 가지 공평성과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텐데 잘 못되면 아까 2분과에서 잠시 나왔듯이 잘못되면 오히려 분식을 가르쳐주는 문제점이 유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페이지를 읽으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큰 틀을 가지고 왜냐하면 복식부기라고 하는 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무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큰 틀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당장 잘못되는 것,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조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부분을 놓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배 교수님이 영국에 도입한지 100년이라고 하는데에서도 나타났듯이 아마 안착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 관련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 마인드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나 행자부 가끔 들어가 회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래서 이 페이퍼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정부회계학회가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아카데미한 학회와는 다르게 행정학과 회계학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런 부분에 틀을 잡아주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심의위원이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그동안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 아주 짧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마인드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얼마만큼 중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각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도 결국은 주무기관이 아닌가 하는 것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미지 자체나 각 단체에 구축이 되어 있거나 구축하려고 하는 BIC와의 관계성은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 그게 큰 틀에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가제도나 원가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그 다음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하면서 텍스에 관련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 그러니까 현금주의로 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텐데 발생주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결국 주무기관과 정부회계학회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구축을 해서 복식부기를 쓰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하는 탑다운식 교육보다도 저는 사례를 찾아야 되지 않는가, 잘된 지자체, 잘못된 지자체, 잘된 지자체는 당연히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지자체는 패널티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왜 잘못 됐는지 분석을 하고 그것이 보존이 되면 아마 이것 우리가 정착을 시키는데 시기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서 주무기관과 정부회계학회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한진수(사회자, 동국대 교수)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 김정호(홍익대 교수)

사실은 토론자는 파워포인트 써 가면서 25분씩 토론을 하는데, 저희는 3분 내로 끝내라고 하니까 사회자가 밭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사실 정운한 사무관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크게 정 사무관께서 발표하신 자료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같이 노력하는 입장에서 특히 법이나 기준 이런 체계적인 면을 다루셨기 때문에 이런 법과 기준을 만들 때는 현장 공무원들도 다 참여하고 물론 학자들이 많이 주도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자세한 지침들은 지방행정연구원이나 또 공인회계사들, 회계법인이 같이 참여해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침 등에 있어서는 비교 가능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같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달 2주 동안 월드뱅크에서 저를 추천해서 베트남 정부에 회계제도개혁에 자문가로서 참여해서 베트남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베트남이라고 해서 굉장히 미개한 나라로 봤고, 제가 한국에서 그동안 정부회계쪽 개혁하는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울 것을 가르쳐 주면 되겠구나! 그러고서 굉장히 우쭐한 마음에서 갔었는데, 사실 저희보다 더 잘 되어 있더라고요. 베트남이 2003년도에 아직 국회에 올리지도 못한 국가회계법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국가회계법에 이미 발생주의 정부를 요구하고 있어서 대차대조표도 다 작성을 하고 미수금, 미지급금, 선급금, 선수금, 감가상각 등 발생주의 항목들을 다 회계정부로서 만들어서 기관들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내가 한수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베트남의 문제는 뭐냐하면 정보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486 컴퓨터를 쓰면서 작업을 하고 정보를 디스켓에 담아서 상부기관에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는데 나중에 받아보면 디스켓이 다 날아가서 아무 것도 없고, 그런데도 정보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

무거나 만들어서 하라고 하니깐 정보를 그냥 대충 끼워맞춰서 보내면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닌 정보가 제일 꼭대기 총리실까지 다 올라갑니다. 하여간 잘 만들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법과 기준, 지침 등을 결국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다행스러운 것은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정보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가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 아까 100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을 우리가 몇 년 만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처음에는 100% 정확한 정보가 어려울 것이고요. 첫 번째 세션에서 여러 가지 지적했던 것처럼 부정확한 점, 무리가 됐다는 점,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시고 병도 나시고 쓰러지시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제인데요. 사실 저희도 다 알고 있는 것이 교육이 탑에 있는 분들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정 사무관님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할 때 보면 높은 분들은 잠깐 들어와서 인사만하고 가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받으십시오.” 하면 당장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가 정보가 틀리던 맞던 신뢰성이 있든 부족하던 그게 작성돼서 보고가 되고 평가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재무보고서 정보에 의해서 예를 들면 예산도 배정받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억지로 소나 말처럼 억지로 끌어다 물을 먹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묵히 일을 하시면 언젠가는 그분들이 뒤늦게 달라붙어서 “내가 이렇게 중요한 걸 몰랐구나!” 하는 날이 올 것 같아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진수(사회자, 동국대 교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효 박사님의 토론을 듣고, 그 다음 답변하고 그 다음에 플로어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이 효(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금 법령하고 기준하고 시스템 쪽으로 해서 행정자치부 정윤한 사무관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면서 향후 과제 쪽으로 제시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제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아마 마음도 급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보완 과제로 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 쪽에서 한번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처음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할 때 기본방향을 일단 예산회계하고 재무회계하고 예산 쪽은 현금주의로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로 해서 갔는데, 그렇게 듀얼시스템으로 물론 가고 있지만 이게 제도 시행 전에 한번 전체적인 법령에 대한 검토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보면 현재 지방회의 기준에 의하면 자산평가 부분을 보시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기타 일반은 취득원가로 하는데 만일 취득원가를 모르는 경우에는 순현재행원가 이런 식으로 파악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채증권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해서 평가하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같이 혼용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현재 제도 상으로 보면 국공유재산이나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국유재산법이나 아니면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이런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도 원가주의와 시가주의가 같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토지, 목주, 건물, 공장물, 선박 등의 경우에는 시가를 참조한 금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채증권,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 및 수익증권에 관해서는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공유재산의 평가에 있어 원가주의, 시가주의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복식부기회계의 기준과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도 자체는 듀얼로 가지만 일단 제도 시행 전에 국가에 있는 각종 법령하고 지방에서 하고 있는 법령하고 특히 지방채정법이나 지방공기업법 어떤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서 향후 이것이 어떻게 일치가 되었나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제도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지방회계 기준법에서 보시면 우리가 지방행정 기준을 작성하면서 주로 생각했던 부분이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무보고 체계를 보시면 정부의 갈등을 보면 수익창출 활동도 있고, 수출정비형 활동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시스템인 경우에는 재무보고 체계를 어떻게 가져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용 회계실체와 다 같이 보고체계를 가지고 갈 것인지.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실체가 어떠한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언제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회의기준이라든가 법령 속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경우에는 이것이 법령이나 기준 속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향후에 만약 우리가 정부형 활동하고 수익창출하는 기업활동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재무보고체계를 실제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 부분,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가는데, 향후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겠다 하는 큰 방향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부분에서 한 부분이 우리가 정부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핵심적인 부분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총 비용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정부기능이나 정책이나 사업별로 수익과 비용을 서로 같이 포함해서 순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인데, 실제 순원가가 파악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예산 쪽에서 예산원가가 잡히지 않으면 복식회계 정부회계 쪽에서 과연 정확한 순원가가 잡힐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부분을 보시면 저는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통합재정 정보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데, 실제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가는 경우에 이게 복식부기회계와 그 외의 여러 가지 제도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제도간에 잘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산출되는 정보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약에 통합재정 정보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장기 전략목표가 일단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핵심성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회계결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장기적인 전략목표, 핵심성과목표, 예산편성, 회계결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거기에 산출된 정보가 실제 연계

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경우에는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전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재무결산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을 향후에는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순서를 바꾸어서 재무회계정보가 나온 산출근거를 토대로 해서 각종 재정계획이나 재정전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나 예산편성을 하는 방식을 이렇게 전체적인 순서를 바꾸는 방식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진수(사회자, 동국대 교수)

감사합니다.

우선 세 분 토론자들의 토론하는 내용 중에서 물론 답변이 필요없는 부분도 있고, 답변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운한 사무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한(행정자치부 사무관)

결론적으로 다 반영해서 하는 쪽으로 해 나가는데요. 조현연 교수님께서 BSC와의 관계가 앞으로 향후 관리 회계쪽으로 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자치단체 별로 변화가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이 단계를 뛰어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부천시나 이런 사례를 통해서 나중에 하려고 했더니, 구체적으로 당장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회계학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리일 수 있겠지만, 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서 분과 자체를 새롭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특히 교육 같은 경우에는 탐다운 방식에서 지자체별 사례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례들을 전파하는 행자부에서 정보교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수님께서 베트남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정보인프라 자체가 얼마나 신빙성이 유지가 되고 계수정보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초창기에 제도정비를 잘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장 공무원이 실제로 참여하는 법과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반드시 해야 하고 특히 위에 있는 분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체제 그것은 끊임없는 연구과제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언뜻 생각이 들었는데 복식회계제도에 대한 축제도 계획을 해 보고 복식부기 박람회도 해 보고 이런 생각이 문뜩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혁신박람회도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서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연말에 해서 그래서 우수자치단체 시상하는 것, 학회에서 다녀보니까 여기가 최고로 좋았다고 좋은 사례를 선전해 주고 신문에, 여기 교수님들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 장도 한번 마련해 보고 그럴 때 기조강연도 하고 자치단체 사례발표도 하고 아주 거창한 장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효 박사님께서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회계제도 개혁사업에 복식부기 법, 제도 만드는데 제가 개인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 제도자체가 어긋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겪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이 행자부 내부에서도 제도담당자들간에 서로의 제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조정해 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부족합니다. 특히 복식부기 담당하는 제가 그런 부분을 완전히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의 시간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추진을 하면서 누구 하나는 복식부기라고 하는 특성이 모든 정보를 축출해 내고 불가사리처럼 연결된 건데 이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알아서 해 보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최소한 우리와의 연결이 되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제도적인 갈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아보면 지방자치단체 실무공무원들간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이뤄지는 부분이 있고, 제가 그것을 발굴해 내서 그런 쪽 장이 이루어지도록 이 부분은 사실은 학회교수님들보다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제도시행 이전 2007년 되기 전에 무엇인가 제도적 방향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기준,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단기적, 장기적 그런 방향 설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를 통한 나중에 원가정보까지 산출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재무정보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하고 간접비 같은 거 배분할 것인가 그것도 아마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관리회계 교과서적 차원이 아니라, 정부회계 쪽은 다른 특성

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획부터 최종 회계결산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정보간 연계가 되는 체제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번에 시연회할 때 제가 봤는데 그런 정보가 연계성을 갖고 있는데 뒤에 가서 다시 앞에 거를 보려고 할 때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무공무원들도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 지적사항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나중에 수정되는 현상이 많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준기지방재정계획을 했다가 없으면 그때 수정하고 있는 현상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당히 이런 부분은 이 호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 이상으로 연구가 실제적으로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최소한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우리들이 정보연계관점에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진수(사회자, 동국대 교수)

오늘 오전에 학회이사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저희들 학회는 4~5년 밖에 안 되지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복식부기 담당자 중에서 정말 타의모범이 되는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표창을 하고 또는 다른 기관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파하고 이런 것을 시작하면 어떠냐 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그것과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회계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피부서나 3D업종이 아니라 가서 잘하면 표창도 많이 받고 진급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쪽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희 학회라든가 행자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고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시스템에 관한 매크로한 문제도 좋고요. 아까 제1분과에서 나왔던 실무담당하는 분들이 겪었던 마이크로한 문제도 좋고, 10분 이상 남아있으니까 여기 복식부기에 대한 정말 책임자가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 좋은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플로어

저희가 행자부에서 아무리 뜻이 좋아도 자치단체가 협조를 안 해 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 사무관님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자치단체장 교육부터 해야 합니

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장 교육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진수(사회자, 동국대 교수)

질문을 다 받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플로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정운한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별 예산제도도 하고 BSC도 하고 복식부기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복식부기 회계제도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담당자님들한테 여쭙보면,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쭙봤더니, 다 똑같아요. 성과측정성과 평가를 해서 측정을 하고, 그전에는 조현연 교수님 계시지만 그러한 부분이 ... 이런 부분도 아까 강인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위에 행자부에서 회계제도 간의 문제거든요. 사업별 예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같은 맥락인데, 이런 부분이 품목별 예산문제 사업별로 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사업별 예산제도 혁신이행제도 분야의 시스템을 보니까 목별예산주의의 그런 문제점을 많이 보완을 하긴 했지만, 세세한 것은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잘 모르겠지만 ... 부분은 명칭만 좀 바뀌었지 그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복식부기가 주가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들고, 이 호 박사님의 토론 때 재무회계결산 중에서 정부의 그런 기능별 운영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정부의 운영보고서, 통합재정보고서 만들다보니까 기능별보고서 만들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순 원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치에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시스템적으로도 그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만들긴 했지만,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약간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회계적인 문제점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플로어

오늘 와서 교수님들, 전문가들 많은 얘기 듣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세미나라든지 올 때 마다 느낀 게 사실은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하게 얘기를 하니까 실무를 보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느냐, 지금 복잡하게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끝도 없는데, 모든 항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행자부에서도 그런 것을 조율해서 각 부처간의 문제라든가, 조율해서 빨리 표준안이 나온 상태에서 그 뒤에 또 발전적으로 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아까 교육문제 나왔는데 오늘도 제가 아침시간에 경남교육원에 가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회계사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복식부기를 할 것인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안들이 성립이 됐다면 빨리 발표를 하든가 아니면 그게 나와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다 됐는데 지금 63개 기관이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전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하게 되면 더 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어떤 안, 개념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초 실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기반이 너무 부족합니다. 실제 활용이 안 돼요. 만들어서 활용이 안 되고 복식부기팀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형식이 돼서 아까 책임문제 나오는데, 이런 환경에서 무슨 책임문제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런 책임문제까지 말씀하면 진짜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이 되려면 각 부처 문제도 공유재산 문제도 나왔는데 기반 각종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먼저 정리돼야 되겠다 하겠고 빨리 정비가 돼서 거기 있는 걸 자료로 그대로 복식부기 실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자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자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시스템 내지는 ... 자료들 이런 거에는 실사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리를 해주시면 기초단체에서 일하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 한진수(사회자, 동국대 교수)

감사합니다.

네 분 정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운한 사무관님께서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한(행정자치부 사무관)

이미 한번 씩 거론됐던 얘기들에 대해서 확인 차 한번 더 얘기를 해 주시고,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하신 얘기도 실제로 마인드나 이런 것, 어찌됐던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뭐 자치단체장이 안 되면 부단체장이라도 하면 될 것 아닌가. 자치단체장을 타겟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표창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행자부 내부에서 다행히 표창할 수 있는 기관이 되고, 저희 복식부기팀에 있었던 직원이 상훈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련을 해 보겠고, 그리고 강인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통합정보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다른 거에 끼워서 평가를 하겠지만 복식부기 이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선생님께서 실제로 최종적으로 성과측정과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복식부기가 주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해 주고, 기능별 운영보고서를 사실 말은 하기 쉽지만 현재 품목별예산제도에서는 기능 자체에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고 다른 기능이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집행에 딱딱 끼워 넣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좀 전에 사업별 재무기준이 앞으로 보완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쪽이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 순원가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계속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김병관 계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우리 행자부가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아픔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빨리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행자부에서 연혁적으로 쥘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귀납법적으로 여러분들의 사례를 발굴해서 가장 표준모형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몇 군데만 시험적으로 해 보면 좋겠지만 실제로 진행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성급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행자부 내부적으로 감사실하고 했을 때 거기서도 일단 제도 자체가 어느 된 성숙된 이후의 문제로, 실제로 자산실사에 보면 벌써 전임 전임

자가 작업해서 누락되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추궁하기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평상시 관리했던 못했던 것을 책임을 묻거나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자산실사에 대한 기반부족 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그동안 잠가고 있었던 것들을 깨우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됩니다.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깨우는 작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단체별로 보니까 벌써 어느 곳은 정리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곳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놓고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불가능하니까 하지 말자. 그래서 좀 더 시간은 걸리지만 그게 당장 내년에 시작된다고 해서 과연 계수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정확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상으로 이게 발전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먼저 주기가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러한 기준도 올 10월 되면 우리가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는 자산에 대한 기초내역을 조사 해 주는 것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아까 그런 부분이 과연 자율 조사라 할 때 어떤 데이터를 기초를 할 것이냐, 도로할 때 지적정보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로관리부서 정보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토지담당부서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취하기 쉬운 데이터를 먼저 한번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점들은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당연히 도로 그러면 어디서든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10월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금 회계처리지침이 있지만 그거 자체가 아직 미완성된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인 거는 그때쯤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진수(사회자, 동국대 교수)

여러분 그동안 끝까지 남아서 토론과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춘계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